

KIPEC BRIEFS

미국의회 주요동향



목차

1. 의회 일정 및 소식	2
2.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4
3. 인공지능(AI)과 수정헌법 제4조 (CRS 리포트 요지)	6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음영 표시 : 의회 회의

□ 5월 주요 정치 소식

미국 주요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동향과 시사점

트럼프 영향력 재확인과 경합주 중심 본선 구도 형성

지난 5월 19일(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주요 주(州) 예비선거는 오는 11월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를 앞두고 양당 내부의 정치 구도와 주요 경합주의 본선 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 일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영향력, 반(反)트럼프 성향 공화당 인사들의 정치적 입지, 주요 경합주의 선거 구도,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동원력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켄터키주 : 역대 최고 비용 예비선거, 매시 의원 낙선

가장 주목받은 결과는 켄터키주 제4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였다. 해당 선거에서는 2012년부터 7선을 지낸 토머스 매시 연방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전직 네이비실(Navy SEAL) 출신 에드 켈라인 후보에게 10%포인트 차로 패배했다.¹ 광고비만 3,200만 달러(약 48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이번 경선은 미국 하원 예비선거 역사상 최고 비용 선거로 기록됐다.²

매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예산·감세 법안인 ‘빅 뷰티풀 빌’에 두 차례 반대표를 던졌으며,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 요구, 이란·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 반대 등 주요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여온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결과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루이지애나주 : 공화당 예비선거, 현직 상원의원 탈락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상원 예비선거에서는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약 25%를 득표하는 데 그치며 3위로 탈락했다.³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은 줄리아

¹ CNN, “Kentucky Primary Election Results 2026,” <https://www.cnn.com/election/2026/primaries/kentucky>
² ABC News, “Kentucky 2026 Live Primary Election Results,” May 20, 2026, <https://abcnews.go.com/Politics/kentucky-2026-live-primary-election-results/story?id=132581024>.

³ CNN, “Louisiana Primary Election Results 2026,” <https://www.cnn.com/election/2026/primaries/louisiana?admin1=22&election-data-id=2026-SR&election-painting-mode=single-party-candidates&filter-key-races=false&filter-flipped=false&filter-remaining=false&selected-admin1-tab-id=primary-staterwide>.

렛로우 연방하원의원(약45%)과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존 플레밍 주 재무장관(약28%)이 다음 달 27일 결선투표(Runoff Election)에 진출했다. 캐시디 의원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죄 투표를 던진 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 한 명으로, 이번 패배는 공화당 내 친(親)트럼프 성향 유권자들의 영향력과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재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현직으로 선출된 상원의원이 예비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2012년 인디애나주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성향 인사들의 정치적 입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지아주 : 경합주 경쟁 본격화

조지아주에서는 공화당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버트 존스 부지사(약38%)와 의료업계 경영인 릭 잭슨 후보(약33%)가 다음 달 16일 실시되는 결선투표에 진출했으며, 공화당 연방 상원 후보 선출 역시 마이크 콜린스, 데릭 돌리 간 결선 투표로 이어지게 되었다.⁴ 반면,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에서는 전 애틀랜타 시장 케이샤 랜스 보텀스가 56.2%를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이는 양당 모두 조지아주를 2026년 중간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높은 조기투표 참여율도 주목되었다. 조지아주에서는 약 100만 명이 조기투표에 참여하며 주 예비선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⁵

조기투표자 중 민주당 투표지를 선택한 비율은 약 57%, 공화당은 약 42%로 약 15%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는 2022년 중간선거 예비선거 당시 공화당이 15%포인트 앞섰던 것과 정반대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나타난 민주당 지지층의 적극적 투표 참여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펜실베이니아주 : 샤피로 영향력 확인, 하원 탈환 전략 가동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조시 샤피로 주지사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 후보들이 브라이언 피츠패트릭(제1선거구), 라이언 매켄지(제7선거구), 스콧 페리(제10선거구) 등 공화당 현역 의원을 상대할 3개 경합 선거구에서 모두 경선 승리를 확정했다. 민주당 연방하원선거대책위원회(DCCC)와 공동으로 후보를 지지한 샤피로 주지사의 당내 영향력이 확인된 동시에,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 전략이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가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샤피로 주지사의 전국적 위상을 가능하는 시험대로도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합적으로 이번 5월 예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영향력 재확인 △반트럼프 성향 공화당 인사들의 정치적 입지 약화 △조지아-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 중심의 본선 구도 형성 △민주당 지지층의 동원력 점검이라는 측면에서 2026년 중간선거의 초기 흐름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⁴ CNN, "Georgia Primary Election Results 2026," <https://www.cnn.com/election/2026/primaries/georgia?admin1=13&election-data-id=2026-GR&election-painting-mode=single-party-candidates&filter-key-races=false&filter-flipped=false&filter-remaining=false>.

⁵ WABE, "Georgia Voters Break the Record for Early Voting Turnout in a Primary Election," May 20, 2026, <https://www.wabe.org/georgia-voters-break-the-record-for-early-voting-turnout-in-a-primary-election/>.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법률(안)	심의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법안 (S.1473)	상원통과 (2026. 5. 21)	Mike Rounds (공-사우스다코 타) (2025. 4. 10)	미국의 경쟁·적대국으로 첨단 AI 반도체가 불법 유출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수출통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 제도와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첨단 반도체 및 AI 기술의 불법 이전 방지와 국가안보 차원의 수출통제 집행 강화를 목표로함.
미 전역 투자 촉진법안 (H.R.2066)	공포 (2026. 5. 19.)	Daniel Meuser (공-펜실베이니아) (2025. 3. 11.)	미국 내 지역경제와 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으로, 농촌·저소득 지역의 중소기업과 반도체·첨단기술 등 핵심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임.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차입 한도를 확대하고, 전략 분야 투자 일부를 한도 산정에서 제외해 투자 여력을 높였으며, 대학기금·재단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해 민간 자금 유입을 확대하도록 함.
미 제조업 금융지원법안 (H.R.3174)	하원통과 (2026. 5. 13.)	Roger Williams (공-텍사스) (2025. 5. 1.)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으로, 제조업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 보증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하여 제조업체가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운전자금, 공급망, 수출 관련 금융 지원 규모도 확대하여 미국 내 제조업 투자와 생산 확대를 지원토록 함.
파이프라인 안전 강화법안 (S.2975)	상원통과 (2026. 5. 4.)	Ted Cruz (공-텍사스) (2025. 10. 6.)	천연가스·원유·수소·이산화탄소 등 에너지 파이프라인의 안전성과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 법안임.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 안전성의 예산과 안전 프로그램을 재승인하고, 위험 기반 검사, 사이버보안 강화, 지질재해 대응, 기상재해 대비, 내부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안전 조치를 확대하도록 함.

<p style="text-align: center;">중국의 대만 공격 억제법안 (H.R.8693)</p>	<p style="text-align: center;">발의</p>	<p style="text-align: center;">Young Kim (공-캘리포니아) (2026. 5. 7.)</p>	<p>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경제적 강압이나 침공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즉각적인 경제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중국 정부·금융기관·에너지·기술·물류 기업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동맹국과의 공조 및 경제 충격 완화 대책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여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고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p>
--	---------------------------------------	--	--

📄 인공지능(AI)과 수정헌법 제4조 : 새로운 법적 쟁점과 의회의 과제 (CRS

리포트 요지)

연방·주·지방 차원의 여러 법집행기관은 일부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방 및 주 의회에서도 법 집행과 AI 활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을 검토해 왔다. 법률계 역시 AI가 범죄 수사와 재판 등 형사사법 전반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주요 쟁점으로는 AI 기반 증거의 증거능력, 양형 과정에서의 활용, AI 기반 로봇 경찰관 도입, 그리고 수정헌법 제4조상 사생활 보호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AI의 개념은 기관과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FBI는 2019년 국방수권법(NDAA)에 명시된 정의를 활용해 왔다. 해당 법은 AI를 인간처럼 사고하거나 행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상당한 인간의 개입 없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성능을 스스로 향상시키는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AI와 관련된 수정헌법 제4조상의 주요 쟁점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첫째는 챗봇 대화 기록 등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법집행기관이 수집·활용하는 문제이며, 둘째는 AI 기술이 결합된 감시 시스템, 특히 자동번호판 판독기(ALPR) 활용 문제이다.

수정헌법 제4조와 AI 데이터 수집

수정헌법 제4조는 정부의 수색과 압수를 제한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수색·압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야 하지만, 일부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챗봇 대화 기록과 사용자 데이터는 최근 형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법집행기관은 방화, 사기, 기물파손 사건 등에서 ChatGPT 대화 기록을 확보하거나 활용하려 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대화 기록이 확보되었으며, 다른 사례에서는 AI 기업에 직접 데이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핵심 쟁점은 챗봇 대화 기록이 수정헌법 제4조상 보호받는 사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연방대법원은 기존의 “제3자 원칙”에 따라 개인이 기업 등 제3자와 자발적으로 공유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수준의 프라이버시만 인정해 왔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AI 기업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과 데이터 역시 헌법상 사생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2018년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같이 민감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연방법원이 챗봇 대화 기록 자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를 직접 판단한 사례는 없지만, AI 서비스의 일상화에 따라 관련 논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방향 영장(reverse warrant)과 챗봇 데이터 활용

최근 미국 법집행기관은 특정 피의자를 먼저 특정한 뒤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존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기업이 보유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용의자를 역으로 추적·특정하는 “역방향 영장(reverse warrant)”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정 장소 인근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지오펜스 영장(geofence warrant), 특정 검색어나 대화 기록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추적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2025년 연방 당국은 아동 착취 사건 수사 과정에서 ChatGPT 대화 내용을 단서로 사용자 계정 정보와 IP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I 챗봇 대화 기록이 직접적인 수사 자료로 활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연방법원이 AI 챗봇 데이터에 대한 역방향 영장의 위헌 여부를 직접 판단한 사례는 없지만, 일부 법원은 지오피스 영장이 수정헌법 제4조가 금지하는 과도하게 포괄적인 “일반영장(general warrant)”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범죄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AI 기반 감시 시스템과 차량정보 추적

AI 기술이 결합된 감시 시스템은 법집행기관의 수사 역량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자동번호판 판독기(ALPR)는 차량 번호판과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특정 특징을 가진 차량을 자동 검색·추적하는 기능까지 도입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방법원은 공개된 차량 번호판 정보 자체에는 제한적인 프라이버시 기대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자동번호판 판독기 활용을 대체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일부 법원은 AI·안면인식·자동추적 기술이 결합될 경우, 장기간 개인의 이동과 활동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광범위한 감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이러한 감시가 개인의 이동 경로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생활패턴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될 경우, 수정헌법 제4조상 사생활 보호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AI 기반 감시 기술의 활용 범위와 영장 필요성 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회의 고려사항과 향후 전망

보고서는 AI 기술의 확산이 향후 수정헌법 제4조와 관련된 새로운 프라이버시 쟁점을 지속적으로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전자도청, GPS 추적, 열화상 촬영, 감청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와 유사하게, AI 기반 감시와 데이터 수집 역시 헌법상 사생활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부 연방법관들은 이러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의회는 저장통신법(SCA) 등을 통해 디지털 정보 보호와 법집행기관의 수사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한 바 있으며, 프라이버시보호법을 통해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정부의 수색·압수 권한을 제한한 사례도 있다.

향후 의회가 AI 기반 감시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새로운 입법 기준을 마련할지, 아니면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을 법원의 판례 형성 과정에 맡길 지가 주요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LSB11429?hl=LSB11429&s=9&r=1>

*본 보고서는 2026년 5월 5일 CRS가 발간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ourth Amendment: Two Emerging Legal Issues (총6페이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발행일 2026년 5월 27일

발행처 한미의회교류센터

『KIPEC BRIEFS』는 한미의회교류센터가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발행하는 미국 의회 입법 및 현지 소식입니다.

KIPEC is registered under FARA. This material is distributed by the 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 Center (KIPEC) on behalf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dditional information is on file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